

다산포럼



임철순 미디어SR 주필·전 한국일보 주필

4월 7일은 신문의 날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지 독립신문 창간 61주년을 맞아 1957년에 제정된 기념일이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오늘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65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를 연다.

올해 신문의 날 표어 대상 당선작은 '신문이 말하는 진실은 검색창보다 깊습니다'이다. 표어라기보다 성명서나 선언서 제목 같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신문상을 담아내려 애쓴 것은 분명하다. 최근 3년간의 대상 당선작은 '신문, 진실을 발견하는 습관' (2020), '신문 보며 배우네. 나무도 숲도 읽어 내는 안목' (2019), '가장 좋은 적금, 신문 읽는 지금' (2018)이었다.

매년 공모하는 신문의 날 표어에는 시대상과 시대정신이 담긴다. 국가 발전이 강조되던 1970년의 표어는 '나라와 겨레와 함께 뻗는 신문'이었고, 세계화를 지향하던 1995년의 표어는 '세계를 읽는 신문 미래를 보는 국민'이었다. 깊이 추구를 강조한 점에서 올해 당선작은 2014년의 '시대가 빨라질 때 신문은 깊어진다'와 비슷

NGO 칼럼

기자들에게 한문을 가르쳐라

하다. 이 표어가 어느 당선작보다 더 좋고 적절하다. 정보의 양이나 신속성에서 신문은 이미 다른 온라인이나 디지털 매체에 추월당한 지 오래다. 정통한 보도와 분석, 뉴스의 상호 연관성과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깊이'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과 SNS가 알려 주는 게 소식이라면 신문이 전해 주는 것은 지식이어야 한다.

신문은 어떻게 해야 깊어질까.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 더 좁혀 말해 신문에 글을 쓰는 사람들, 기자들이 깊어져야 한다. 기자가 깊어지려면 먼저 자기가 쓰고 있는 글과 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사물과 언어의 정확한 개념이나 의미를 모르면 제대로, 깊게 글을 쓸 수 없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쓴 기사가 많고, 잘못된 기사는 신속하게 복사돼 전승되거나 전파되고 있다. 예를 들어 'LPGA 21승 박인비, 여자 골프 세계 랭킹 2위 등극'과 같은 제목을 붙인 기사는 '등극(登嶽)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거나 어떤 분야에서 가장 높은 자리나 지위에 오른다는 뜻을 모르는 것 같다. 박인비가 랭킹 1위가 됐다 해도 조심해야 할 표현이다. 심지어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기부 요정'에 등극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다. '유명세(有名敍)는 유명해져서 겪는 불편과 피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명세는 원래 '치르느' 것이다. 그런데 많은 기자들이 '유명세를 타고'라고 쓴다. '유명세(有名敍)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초토(焦土)가 불에 타서 검게 된 땅이라는 걸 아는 기자라면 흥수 장마로 망가진 지

역을 초토화됐다고 보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과 불은 정반대 아닌가.

'안위(安危)는 안전과 위험(또는 위기)이라는 말이다.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안위를 늘 걱정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안위를 위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마음을 위로하고 몸을 편히 한다는 '안위(安危)로 잘못 안 탓이다. 대통령들이 그렇게 연설하면 기자들은 그대로 받아 썼다. 또 '금도(襟度, 남을 용납할 만한 도량)를 '남아서만 안 되는 기준', 즉 '금도(襟度)인 줄 알고 정치인들의 잘못된 말을 답습하곤 한다. '지급'과 '지벌'의 차이도 모른다. '충돌'과 '추돌'이 다르다는 건 알지만 왜 '추(追) 자가 들어가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이게 다 단어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이다.

기자들을 대상으로 어문 교육 특히 한문 교육을 해야 한다. 기자 양성이나 수습기자 교육, 재교육(이런 기회는 사실 드물지만) 과정을 보면 기사 작성 요령, 언론 법제와 윤리, 언론의 사명에 관해서는 많이 가르치지만 어문 교육은 전무하다. 왜 토익이나 토플 성적은 그렇게 중시하면서 한자가 태반인 우리 어문은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성적을 따져 보지도 않는가.

기자는 모든 것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며, 어떤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기자의 얕이 신문의 얕이든, 기자의 깊이가 신문의 깊이다. 기자들 스스로도 학습을 해야 하지만 체계적 제도적 어문 교육 특히 한자 교육은 신문이 깊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도박 중독,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

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도박 중독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 중 하나가 현실 세계의 (경제적) 좌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인데, 자극의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일찍이 도박하는 사람을 가리켜 '확실한 것에 불확실한 것을 거는 사람들'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도박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걸고 내기를 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도박에 중독된다는 것은 도박의 결과가 자신에게 명백한 해를 끼치고 있음을 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이다.

도박 중독은 그 폐해가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막대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한 조사에 따르면 1년간 도박중독자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 78조로 추산된다.

최근 도박 문제로 전문 상담을 요청하는 지역민들이 늘고 있고, 도박 시기의 저연령화까지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전남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는 지역민의 수가 전년도 1분기 대비 1.5배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재발을 호소하는 지역민들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중·고등학생의 도박 문제 조사 결과, 17개 시도 중에서 광주시가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도박 문제의 지역 실태에서부터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수준의 증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도박 문제의 위험 요인은 감소시키고, 보호 요인은 증가시키는 지역사회 전체의 협업과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는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전문 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폐해를 최소화하는 정신 건강 서비스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도박은 돈을 딸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쉽게 중독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도박을 경험하는 최초의 시기 전후에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해당하며, 도박 문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제공을 위한 토대 마련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며, 가정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도박 문제는 일종의 심리적 통증이자 사회적 통증과도 같다고 본다. 이제 우리는 도박 문제를 지역 내 한 개인의 취약한 문제로 바라보는 방식을 중단하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지역 내 사회문화적 환경의 개선과 함께 회복을 돕는 심리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박 저항성을 갖춘 여가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는 적절한 예산과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지역민의 도박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고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도민 행복 신고 달린다

인상당수는 곤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세 명 중 한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 수준인 43.8%에 달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한국은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인구 비율이 14%이던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전남은 2014년에 20.1%로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장애인 인구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비율도 선두권이다. 이런 지표를 보면 전남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돌봐야 할 취약계층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는 국민의 기본생활과 노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국민기초연금제도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조차도 지원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전부 아니면 전부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지원 경제 선상에 있는 국민이 오히려 더 어렵게 생활하거나 위기 시에 지원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잘 마련된 제도나 정책도 지원 시기를 놓치거나 현장 상황과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전남은 도시와 오지가 많고 전기·수도·보일러 등을 수리·수선하기 위한 생활 기반시설도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선 7기 김영록 전남지사 공약으로 추진한 것이 바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다. 복지기동대는 명칭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우리 동네 이웃에게 발생한 어려움

과 불편 사항을 가장 잘 아는 이웃이 나서서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우리 동네 안전망이다. 기동성을 고려해 297개 모든 읍면동에 설치했으며, 대원 대부분을 전기·가스·수도·보일러 등 생활 불편 해결 전문가로 구성했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면서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주민도 근거를 마련해 지원해 오고 있다. 기동대가 직접 해결하지 못한 사안은 읍면동에 배치된 사례 관리사와 연계하여 맞춤 지원을 받게 했다. 이런 이유로 복지기동대는 80·90년대 인기에 비해 방송된 드라마 속 주인공 ‘떡가이버’라 할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은 연계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는 등 처리하지 못한 문제가 없으니 말이다.

올해부터 복지기동대는 노인 인구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더욱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서비스를 확대한다. 전국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서비스 대상 기준을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했다. 소방·안전 등 전문 기관 참여 확대와 퇴직 자원의 기동대원 위촉 등 재능 나눔 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향우회·기업·단체를 대상으로 후원 도우미를 운영하고 민간 봉사단체 자원을 활용한 통합 맞춤 서비스도 강화한다. 출범 2주년을 맞이한 복지기동대가 도민의 일상 속 에 자리매김하면서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여는데 앞장서 달리고 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어려움에 처한 전남도민을 위해 언제나 출동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社說

나주시, 부영에 끝내 특혜 베풀려는 것인가

부영주택이 한국에너지공단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땅을 용도변경해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신축하려는 데 대해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때 이번에는 나주시가 부영주택이 이미 기부한 대학부지까지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나주시는 이달 중 ‘부영CC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부영 측은 부영CC 잔여지 35만 2924㎡ 중 아파트 건축용지를 제외한 4만 5367㎡(12.8%)를 공공을 위한 기부채납지로 내놓겠다는 애초 사업안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채납 대상은 학교용지·도로·공원 등 아파트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시설들만 어문 교육은 전무하다. 왜 토익이나 토플 성적은 그렇게 중시하면서 한자가 태반인 우리 어문은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성적을 따져 보지도 않는가.

이에 더해 나주시는 공공 기여 대상에 부영 측이 1년 전 기부한 대학부지까지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이미 무상 기부한 대학부지를 용도변경 과정에서 기부채납 목록에 재차 포함시켜 공공 기여를 인정해 주

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자연녹지인 부영골프장 잔여지에 공시지가(㎡당 6만 6000원)를 적용해 단순 계산할 경우 전체 땅값은 231억 원 정도 된다. 하지만 이를 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주거지역(㎡당 75만 원)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땅값은 2450억 원으로 열 배 이상 폭등하게 된다. 여기에 부영 측이 계획대로 53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경우 수천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주민들로서는 녹지가 사라지고 대단위 아파트가 추가 공급되면서 교육·생활 여건 악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혁신도시 주민 전체를 위한 공원이나 공공시설 조성 등 공공 기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도 나주시가 부영주택 측에 끌려다니며 업체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것은 또 다른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 자리에서 묻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이미 무상 기부한 대학부지를 용도변경 과정에서 기부채납 목록에 재차 포함시켜 공공 기여를 인정해 주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에 지원까지 끊긴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코로나19 기본 방역수칙의 제도 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역수칙을 어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태료는 업종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다. 특히 방역수칙을 어긴 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손실보상금 등의 지원을 끊거나 줄이게 된다. 여기에 확진자 발생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면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극 이뤄진다.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네 가지 수칙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세 가지가 새로 추가됐다. 기존 수칙 내용도 강화돼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이 일절 금지된다.

또 이전에는 거리 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으나, 이제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출입명부 역시 방문자 전원이 작성해야 하며 대표자 한 명만 작성했을 경우 나머지 사람은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이 보다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에 이르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無等鼓

나무는 나무 나름대로 제각각의 수형(樹形)을 갖고 있다. 그래서 멀리서 형태만 보고도 느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포플러인지 금세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나무는 장소에 따라 제 모습대로 살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오래전 네덜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트래킹을 하며 봤던 나무들이 그러했다. 해발 3400m에 자리한 남태 바자르를 향해 길을 닦았다. 소나무나 전나무류 등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모양이 너무나 특이했다. 전뿔대 높이만 한 나무인데도 가지 하나 없이 매끈했다.

‘토르소 가로수’

한눈에 봐도 인공적으로 가지를 모두 잘라 낸 것이었다. 맨 꼭대기에만 작은 가지와 잎들이 달려 있는 모습이 마치 거꾸로 세워 놓은 먼지떨이를 연상시켰다. 현지 가이드 설명에 따르면 발목을 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여직적으로 가지만 잘라냈기 때문이었다. 취사와 난방에 필요한 연료를 구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을 감안해도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가지치기는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로수로 심어진 아름드리나

무들이 몸통만 겨우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 모습은 흡사 머리와 팔다리를 생략하고 몸통만을 표현하는 토르소(TORSO) 조각 작품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가로수 나뭇가지가 전신을 건드린다거나, 가게 간판을 볼 수 없게 가로막는다는 민원 등등…

이런 ‘토르소 나무’는 도로뿐만 아니라 학교 교정과 개인 정원 등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몸통만 남아 있는 나무 입장이자면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닐 것이다. 지나친 가지치기는 결국 나무를 고사시킬 수도 있다. 어제는 식목일로 가지를 모두 잘라 낸 것이었다. 전국적으로

많은 어린 나무가 심어졌을 터이다. 그렇지만 새로 심는 것 못지않게 있는 나무를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다. 비록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지만 초록의 봄날은 우리들에게 많은 위안을 준다. 몸통만 남은 가로수에도 경이롭게 새잎이 돋아나고 있다. 앞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가로수를 심고, 지나친 가지치기를 삼가며, 푸른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 행정을 당국의 세심한 나무 정책을 기대한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우홍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

지난해 한 요양보호사로부터 긴급 신고가 접수됐다. 간헐적으로 치매 증상을 보이는 할머니를 방문했는데 집안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전화였다. 긴급 상황임을 직감하고 출동해 보니 전선이 타고 있었다. 즉시 전선을 교체하고 안전 점검도 해드렸다. 조금만 늦었어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또한 할머니가 청소 일을 하면서 손자를 키우는 가정 이 있었다. 평소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가 허리 수술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위기가 찾아왔다. 생계 지원금 만으로 병원비와 손자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손자가 학업을 포기할 상황이었음에도 도내 민간 장학재단과 연계하여 고교를 마치게 됐다. ‘생활 불편제로, 언제나 부르면 오케이’라는 기치로 출범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가 도민 지킴이로 자리 잡고 있는 사례들이다.

복지기동대는 지난 2년 동안 위기에 봉착하거나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6000여 가구의 어려움을 덜어 드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월에 발표한 ‘주요국 고령화 현황’에서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20년 후에는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에 반해 한국 노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주국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